

한국당 추경 거부...6월국회 '빈손' 마무리

국방장관 해임·국정조사 요구 여야 대치 7월국회 개최 불투명

여야의 대립 끝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

루만 여는 조건으로 7월 임시국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한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추경 처리를 위한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어 입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당은 여당이 추경 처리만 압박하면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가 없는 이상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국면을 여권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7월 임시국회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추경,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소독없이 막을 내린 것은 국정 운영을 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추

경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22일 오전에 열리는 만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또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오는 24일 출국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초가 7월 임시국회 문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가 소독없이 끝나 국회 전체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며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상정 "이번주초 정개특위 위원장 넘길 것"

"輿 선거제 개혁 확고한 의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이번 주 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은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홍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기까지 저와 야3당의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는 국회 관행과 정치 문법으로서의 수용하기 어려운 무례한 일이었다"면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정개특위 연장을 외피로 쓰고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개특위 재구성"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어서 저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은 기간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의결하는 주제는 홍 의원의 소임"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국익, 법치를 무시하는 제1야당에 끌려다니는 국회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 원칙 속에 선거법 처리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대응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주 준 불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 결과와 8월 1일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지켜보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를 포함한 모든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불탄 내일 방한...한·일 중재 역할 주목

존 불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불탄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불탄 보좌관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출국했으며, 일본을 먼저 들른 뒤 방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불탄 보좌관의 한일 양국 방문이 한일 갈등사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불탄 보좌관이 방한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재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를 반영하듯 불탄 보좌관의 한일 양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불탄 보좌관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부산을 찾아 정 실장, 야지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장관과 3자 회동을 하려 했지만, 취소된 바 있다.

또 불탄 보좌관은 한국을 방문해 흐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와 관련한 한국의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산한 김포공항 일본 출국장.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가 불러온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주요 여행업체 대부분의 일본여행 예약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일본항공 탑승 수속 카운터 모습. /연합뉴스

여야, 금주 日 대응 비상협력기구 실무협의...세부조건은 입장차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 한국당 "재제도 포함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꾸리기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회동을 갖고 비상협력기구의 형태, 참여하는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여야정비 비상협력기구 만들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

장들이 협의해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협력기구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의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모이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며 "정부 쪽은 협의를 해보아야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의위원회"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같다고 보고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장단기 해법을 찾기

위한 대응 시스템으로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를 포함한 민관정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민관협력 시스템 안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련(経団連) 등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재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치권의 의견 제시와 함께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받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한시적이거나 범정부적인 기구인 만큼, 입법적·제

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유관 단체나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이를 확대해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입재훈 사무총장은 "당마다 온도 차는 있겠지만 양심과 책임감이 있는 시민단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5당이 어렵게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뜻을 모았지만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 조율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조국 "겁먹고 쫓지말자"...대일 여론전 박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한 대일 여론전의 최선봉에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 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루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지 못한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 "지레 겁먹고 쫓지 말자"라고 남겼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태양광발전소를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